

大學新聞과 地域文化

林 在 海
(安東大 大學新聞社 主幹)

오늘날의 대학신문은 社會變革과 이데올로기 문제 등에 경도되어 있다. 하지만, 地域社會의 요구로 설립된 대학이 우선적으로 社會奉仕 기능에 충실하여 地域文化의 發展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大學新聞은 더이상 사회 체제나 이데올로기 문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地域社會와 地域文化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 大學新聞의 特殊性과 自由

대학신문은 예사 신문과 다르다. 대학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이 편집하고 원고를 써서 대학의 재정으로 발행하는 신문이라는 점에서 예사 신문과 다른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대학신문도 신문의 한 종류임에 틀림없다. 신문이 지니는 매체로서의 형식적·내용적 속성을 저버리게 되면, 잡지가 되거나 팜플렛이 되어 다른 범주의 매체로 귀속되어 버린다. 자연히 대학신문도 신문이 가지는 一般의 性格을 벗어나서는 제 구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으므로 신문 일반의 속성을 마땅히 지녀야 한다. 따라서 대학신문은 신문 일반의 기능과 더불어 대학이 가지는 기능을 함께 발휘할 때 大學新聞으로서의 位相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이 대학의 기능과 신문의 기능 또는 대학의 속성과 신문의 속

성이 어떻게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는가라는 점이다.

양립하는 두 영역의 均衡이나 調和는 기계적으로 양분하거나 수학적인 비례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존재의 본질에 입각해서 합리적 일치점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신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실제로 이 일에 참여하는 성원들의 성격부터 따져보자. 대학신문의 기자는 학생인가, 기자인가? 물론 학생이면서 기자이다. 기자이므로 학생이 된 것이 아니라 학생이므로 기자가 된 것이다. 주간교수나 발행인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신문의 주간이므로 교수인 것이 아니라 교수이므로 주간 노릇을 하는 것이며, 대학 행정의 책임자인 총·학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학생기자가 대학생으로서 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기자로서만 충실하거나, 주간이 교수로서

담당해야 할 강의와 연구 활동을 희생시켜 가며 주간 노릇에 함몰되어 있다면 학생이나 교수가 함께 불행한 일이다.

대학신문도 같은 맥락에서 그 위상이 포착될 수 있다. 대학신문을 전제로 대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이 우선적으로 존재하고, 대학의 바람직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침내 등장한 것이 대학신문이다. 자연히 신문의 기능과 역할에 앞서 大學의 職務와 機能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신문이 대학의 발전이나 이상을 키워가는 것을 부추기는 매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대해 역기능을 발휘한다면, 마땅히 그 존재 의의가 심각하게 제기될 만하다. 그러므로 만일 대학과 신문이 충돌을 일으킨다면, 대학의 주장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마땅하다. 즉, 신문을 위한 대학이 아니라 대학을 위한 신문이 대학신문의 위상이다. 그러나 무엇이 대학을 위하는 것인가는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다. 적어도 대학신문은 일반 신문과 달리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닌 신문이어야 한다는 점에 우리는 동의하게 된다.

대학은 누가 뭐래도 학문하는 곳이다. 학문의 세계에서 추구해서 안 될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진리를 추구하든 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創造的인 學問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과 사회 질서, 학문의 체계 등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해야 한다. 批判的 認識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창조적 작업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금 거두어 들인 창조적인 성과도 또다시 비판되어야만 학문의 발전이 가능하다. 이른바 學問의 自由는 학문 활동에 관해 어느 누구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만, 상식이나 정설로 굳어진 사실까지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하기도 한다. 비판의 자유야말로 창조적 학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大學이 自由로와야 하는 까닭도 결국은 學問의 自由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대학의 부속 기관으로 존재하는 대학신문이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하는 까닭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일반 신문에 대

한 제약은 언론 탄압이라는 비민주성의 문제로 그칠 수 있지만, 大學新聞의 統制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言論의 自由뿐 아니라 學問의 自由에 대한 侵害라는 사실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학신문의 특수성은 대학의 본질에 입각하여 그 어느 신문보다 더욱 자유로울 때 확보되는 것이다.

2. 大學新聞의 自由와 念慮의 問題

大學新聞의 特殊性에 따른 자유는 실제로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다. 오늘 이 땅의 대학신문은 기자들의 희망 사항을 모두 실현시키고 있지는 못하나, 그래도 문교부 당국자나 주간교수들이 염려할 만큼 자유롭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를 주장하는 쪽이든 염려를 하는 쪽이든 그 준거가 大學의 本質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한결 같이 체제의 문제나 이데올로기 문제에 집착해 있기 때문이다. 대학신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기사는 이 문제로 채워져 있다. 대학의 성장이나 학문의 발전과 상관없이 대학신문은 이 문제를 통해 체제를 비판하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려는 변혁 의지로 충만해 있는 데 반해, 염려하는 쪽은 이를 금지함으로써 체제 유지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려는 데 몰두해 있다. 대학신문의 자유와 통제는 바로 여기서 마찰을 일으키기 일쑤이다.

대학신문의 성격상 이 문제에 관한 어떠한 주장도 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논리 정연하고 대학인의 지적 수준에 맞는 문장이라면 얼마든지 대학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논의의 결과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사회주의 이론이나 주체사상에 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고, 사회구성체론은 상당한 수준의 학문적 성과까지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오직 대학신문에 의해서만 거두어진 것은 아니지만, 대학인들이 여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 데에는 대학신문의 몫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은 이들 문제는 대학에서 다루어야 할 수 많은 분과 학문과 전공 분야 가운데 한 분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학

이 운동이 문제에만 매달려있어서는 학문의 올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학을 university라고 하는 것도 학문 활동의 universal한 성격, 즉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통용되는 각 분야 전문적 지식의 총체적 내용을 두루 다루는 包括性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과 학문의 영역과 관심을 두루 수렴해 나가지 않으면, 대학신문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편견과 독선처럼 그 반대편에서 또다른 편견과 독선에 빠지게 된다. 어느 쪽의 편견이든 一定한 傾向性을 폐쇄적으로 고집하게 되면 獨斷의 劃一性에 빠져 대학의 이상과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은 아직 연구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에 있는 학도들이다. 끊임없이 기존의 지식에 대해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보다 나은 결론을 얻기 위한 방법적 모색을 계속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도 이미 거두어진 결론의 어느 한 쪽만을 수용해서 決定論的으로 適用하거나 一方의인 選擇을 강요하는 것은 순조로운 학문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대학신문의 자유를 주장하는 쪽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자기가 무엇을 전공하든 또는 어떤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의 글이 한결같은 내용으로 틀 지워져 있다면, 또는 이른바 자유 기고가나 특정 집단으로 필자가 한정되어 있어 대학인의 자유로운 참여의 길이 의도적으로 막혀 있다면, 작가는 대학신문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크게는 대학과 학문 모두를 병들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염려하는 쪽의 관심도 기사 자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학신문이 지니는 전체적인 모습을 크게 보고 조화와 균형을 이룬 '열린 시각'으로의 편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共時的으로 신문의 특정 호만 볼 것이 아니라, 通時的으로 그 전·후 관계의 脈絡도 보아야 한다. 또 대학신문 자체의 문제도 한정하여 보아서도 안 된다. 대학 바깥에서 전개되는 정치와 사회, 경제 문제들과 두루 맞물려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80년대 초반까지는 대학신문이 지금처럼 경도

되어 있지 않았다. 자연스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되었기 때문이다.'80년대초까지의 통제는 오히려 지금과 반대 쪽으로 기울어져 있도록 만든 셈이다. 그동안의 통제가 풀리고 대학과 사회가 꽤 자유로워지면서 민주화의 진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게 된 현상이 지금과 같은 대학신문의 모습을 이룬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현상은 지나친 조임이 풀어지면서 생겨난 필연적인 결과로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풀림이 계속되고 여기서 벗어지는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심각하게 되면, 자연히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반작용의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개선을 기대하며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것은 연구 기관이자 교육 기관으로서의 大學의 任務를 저버리는 일이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 실득,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검열하고 징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적어도 大學新聞의 特殊性을 인정한다면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주간교수 스스로 검열자도 인식하거나 기자들로부터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면, 그 주간교수는 참으로 불행한 존재이다. 주간교수의 O.K. 표기가 '편집 상태 마땅하고 원고 내용 좋음'이 아니라 '원고 검열 끝'을 상징하는 한, 주간교수는 높은 감시탑 위에서 전조등을 비치고 있는 경비원처럼 초태해질 수밖에 없다. 문교부나 기타 대학신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담당자도 마찬가지이다. 오류를 근거로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바른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안내자 노릇을 할 때 문제 해결에 빨리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대안의 하나로 대학신문과 지역문화의 관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3. 大學新聞의 機能과 地域社會

일반적으로 대학의 기능을 研究·教育·社會奉仕라고 말한다. 그런데 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이 결국 사회봉사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회 발전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 大學은 사회 안

에서 존재하고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社會的 實體이다. 따라서 연구와 교육도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대학의 임무를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교수의 연구 성과가 교육이라는 방법으로 대학이라는 제도적 기구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되어야 할 뿐 아니라 대학 밖의 사회를 향해서도 널리 선포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실제 최근 10여년 동안 우리 대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문제에 관해서 많은 발언을 하고, 대학신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더 이상 대학이 상아탑의 의미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고전적 의미에서 대학은 학술의 수도원이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대학은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 공중을 위한 주유소의 구실을 담당한다.” “현대의 대학에서는 시민과 대학인의 구별이 없어졌다. 그래서 대학은 학내 구성원의 요구뿐만 아니라 학외 구성원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趙要翰, ‘大學의 民主化’, 大學教育, 제41호, 1989). 옳은 말이다. 대학의 이런 역할들은 대학신문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신문은 공중을 위한 주유소 노릇을 담당해야 할 뿐 아니라 대학 바깥 사람들의 요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대학신문은 오히려 이러한 구실과 요구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노동 현실과 정치 활동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비중 높게 다루고 외부 필자들의 원고를 많이 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서 대학신문이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면 생각이 너무 단순하다. 왜냐하면 일반 공중 가운데 특히 누구를 위해 기름을 공급하고, 학외 구성원 가운데 특히 누구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가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맑스주의 비평가인 프레드릭 제임슨은 한국에 와서 논란 점이 ‘대단한 산업적 생산성과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아직도 고도로 정치적이다’라는 사실’이라고 한 바 있다. 우리 대학신문도 지나치게 政治的이 아닌가라는 反省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깊은 반성을 요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구체적인 대상

으로서 대학 사회와 동떨어진 특정 집단만을 겨냥하지 않았는가, 또는 대학이 터하고 있는 이웃 사람들을 제쳐 두고 멀리 있는 이름난 사람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지 않았는가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학이 실질적으로 터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는 地域社會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지역사회의 문화를 선도하는 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민족문화 창달에 앞장 선다든가, 그 대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국가적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 어느 쪽도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그것은 자기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서 인류를 사랑하겠다는 식의 억지일 수 있다.

대학이 公衆을 위한 바람직한 注油所라면, 가난한 이웃에게 기름을 주지 않으면서 먼 데 있는 대도시 주민을 위해 송유관을 묻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학외 구성원의 말에 합리적으로 귀 기울이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더불어 사는 이웃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먼 곳의 사람이 의처대는 이야기만 듣겠다는 태도는 지니지 않을 것이다. 대학이 사회봉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길도 구체적으로는 지역 사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학신문도 같은 맥락에서 지역 사회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대학이 그러하듯이, 대학신문이 가지는 地域的 特徵을 찾아 보기 어렵다. 기획물에서 특징, 논단, 기획 광고에 이르기까지 획일성을 보이고 있다. 이래서는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주도한다는 보다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대학신문 자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학신문의 내용을 보면, 마치 재벌 기업의 독과점 품목처럼 한결같은 내용과 주의·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치 5공화국 시대의 언론이 보도 지침에 따라 획일성을 지니는 것에 비견될 만하다. 이 때 배포되는 신문들은 제호만 달랐지 사실상 같은 기사에 같은 논조를 유지했다. 중앙지들 상호 간은 물론 중앙지의 지방지의 개성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것 하나만 보면 축할 정도였다. 수 많은 일간지들이 제각기 존립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우리는 이러

한 신문들을 싫어한다. 獨寡占의 성격과 無個性을 함께 배격한다. 非民主적이고 反歷史적인 신문이기 때문이다. 통제받고 검열받는 신문이기 때문이다. 5공의 언론 정책이 청문회에서 커다란 쟁점이 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열린 구조의 언론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한 개성있는 신문이 나올 수 없다.

오늘의 대학신문은 어떠한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각기 고유한 대학신문으로서의 개성이 도드라져 있지 않다. 고정란의 제호나 컷 및 등판의 문양이 다르고 지면 배경에 다소 차이를 보이기 는 하지만, 중심되는 논조는 모두 같다. 사정이 이러하면 대학신문도 한 두 대학의 것만 있어도 좋을 듯하다. 수 많은 신문들이 모두 한 입으로 같은 주장을 한다면, 그들 신문이 따로 따로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의 대학신문도 5공 시대의 언론처럼 보이지 않는 통제에 의해 간섭받고 있는가? 대학신문에도 누군가가 보도지침을 내리고 특정 방향으로 신문을 제작하도록 조종하고 통제한다면, 대학언론 역시 비민주적이고 반역사적 언론 문화에 갇혀 있는 셈이다.

대학신문이 사회봉사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닫혀 있는 구조로부터 해방되어 독자적인 언론으로서의 個性과 融通性을 함께 확보하는 길은 범사회적인 문제보다 대학 사회의 이웃, 즉 地域社會의 問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 사회의 문제는 곧 해당 대학의 문제이며,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 사회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의해 대학이 설립되었으므로 지역 사회의 문제와 대학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물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다수의 대학들은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지방 대학은 지역 주민들의 여망과 지역 사회의 필요에 입각하여 설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또는 대학신문이 지역 사회 문제를 의면하게 되면 결국은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安東大만 하더라도 지역 사회 주민들이 대학 설립 운동을 벌인 끝에 마침내 세워졌다. 1977년 2월 15일에 '국립 안동대학 설립 유치 추진 위원회'가 발족되고, 다시 같은 해 3월 27일에는 '국립 안동대학 설립 유치 후원회'가 별도로

발족되면서 2년에 걸친 다방면의 유치 활동 끝에 1979년 3월에 안동대학을 개교하게 되었다. 이처럼 주민들의 요구와 노력에 의해 설립되고 발전되는 대학이 지역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지역인들이 베풀어 준 고마움을 저버리는 셈이 될 뿐 아니라 지역 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상실하게 된다. 대학신문 역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같은 오류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면 대학신문이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주유소' 노릇과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매체' 노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4. 大學新聞과 地域文化 發展

지역 사회가 대학을 유치하고 발전시키려는 까닭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대학 설립을 통해 지역 사회의 정치적 입지를 높인다는가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려면 거물 정치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단을 만들고 산업체를 유치하며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더 지름길일 수 있다. 대학에 거는 보다 근본적인 기대는 이러한 분야보다 지역 문화의 발전에 있다. 대학이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적·간접적으로 바람직한 영향을 주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역시 文化的 領域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대학신문 역시 같은 부문에 공헌해야 한다. 즉, 대학신문은 지역 사회의 '문화 주유소' 노릇을 직접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동시에 지역 신문으로서 주민들의 '언론 매체' 노릇까지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대학에서 연구하고 창작하는 學問 成果와 藝術 作品이 대학신문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분과 학문의 연구와 창작 결과들을 대학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더불어 共有할 수 있어야 地域文化 발전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자연히 대학신문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활동과 작품 활동에 관한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그 성과가 널리 소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 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더욱 집중적으로 다루고, 지역 문

계 연구와 지역 문화 활동을 유도하는 기획이나 특집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에 의해 벌어지는 문화 활동에 관한 소개와 논평을 함으로써 대학인들이 지역 사회의 성원으로서 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학과 사회는 제각기 다른 영역에서 다른 문화를 향유하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대학은 사회의 한 구성 단위이며 대학인 역시 지역 주민으로서 사회의 성원일 뿐 아니라, 마침내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일정 기간 대학에서 수련을 쌓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신문은 대학인으로 하여금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학술 강연회, 연구 활동, 문화 모임, 각종 예술 활동과 전시회, 공연 및 연주회 등에 성숙한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 경향성을 지닌 문화 단체의 활동에 한정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특정한 문화 갈래만을 다루는 것도 문제이다. 이를테면 연극 분야의 경우에는 으레 마당극 양식이나 민중극을 포방하는 단체의 활동과 작품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미술 분야의 경우도 이른바 민중미술로 규정되는 민화 양식이나 관화 양식들만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문화의 다양한 존재 양식과 예술 작품의 갈래별 독자성을 폭 넓게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大學新聞의 이러한 偏僻性은 우리가 도덕적 당위성을 내세우며, 늘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도권 언론과 같은 오류를 다른 방향에서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감상이나 논평의 경우는 다른 많은 분야들을 제쳐 놓은 채 주로 영화평이나 서평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본격적인 評文보다는 감상이나 단순한 소개에 머무는 단편들이 대부분이지만, 연주회와 특창회 등 음악 활동의 공연평과 사진·시화·서예·그림 등의 전시회 평도 고르게 다루어야 한다. 대상의 전문성 때문에 기자들이 직접 다루기 어렵다면 해당 학과 학생이나 전문 분야의 동아리 모임 성원들을 통해 위촉할 수도 있고, 전공 교수에게 청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실 대학은 불가능이 없고, 대학신문은 다루지 못할 기사가 없는 것이다. 대학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풍부한 인적 자원을 고루 그리고 넉넉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신문이 이러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신문 자체의 기능도 균형을 잃고 내용의 깊이를 획득할 수 없게 되어 그 편향성과 비전문성 때문에 지역 주민은커녕 대학인 스스로도 대학신문을 외면하게 된다.

여기서 더욱 문제되는 것은 지역성과 상관없이 일간지나 기타 잡지 및 단행본에서 이미 다룬 내용들을 거듭 다룬다는 점이다. 특히 영화평과 서평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 짙다. 지역 사회에서 영화 활동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지만, 저작 활동을 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세간의 신문과 대중 매체들이 저자의 명성과 책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평을 신드라도 대학신문은 사정이 달라야 한다. 대학 성원들의 저작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지역 사회에서 쓰여지고 출판된 책들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른 분야의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학내 학술 활동의 정보가 순조롭게 교환되고 지역 사회 문화 활동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서울 중심의 文化從屬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학신문은 서울 중심의 문화 집중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펴면서도 스스로 이를 극복하려는 實踐的 意志를 보이지 않는 것은 남득하기 어렵다.

서울의 학생이 특정한 책을 읽고 그 저자인 교수를 찾아 시골 대학을 방문했는데, 그 대학 학생들에게 해당 교수의 연구실을 묻기 위해 몇 차례 대화를 했으나 아무도 자기 대학의 교수가 그러한 책을 썼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는 이야기 역시 대학신문 및 대학 언론의 기능이 가진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대학신문이 '주유소' 노릇을 하되 자체 생산의 석유나 지역 사회에서 채굴된 석유는 제쳐 두고 손쉬운 대로 유명 상표가 붙은 수입품만 팔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적영 공장도 망하고 지역 사회의 공장도 문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대학

신문은 대학 적영 주유소로서의 구실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다.

대학신문이 지역 문화에 기울이는 관심이 문화인에만 한정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문화란 문화인만이 생산하고 향유하는 것이 아니며, 문화인을 위해 있는 것만도 아니다. 흔히 문화란 지식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고 돈 많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들만이 향유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만일 대학신문이 이러한 시각으로 지역 문화를 다룬다면, 그동안 스스로 추구한 ‘민중 문화의 구현’, ‘민주화의 성취’, ‘민중 주체성의 확보’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른바 고급 문화만 문화로 여기는 생각은 반민중적이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양식이 곧 문화라는 시각을 가지고 이들의 일과 놀이, 信仰과 儀禮에 두루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民主化는 文化의 共有로 확보된다. 사회적 지위와 재산의 정도에 따라 향유하는 문화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고 삶의 방식조차 차별지워져 있다면, 구조적으로 민주적인 사회라 할 수 없다. 정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다 소망스러운 삶은 정치적인 민주화보다 문화적인 민주화라는 점에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정

권의 자유로운 교체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일하고 놀고, 믿고 의뢰를 행하는 문제들이 차별받고 제약받는다면 실제 생활 속의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地域文化는 일정한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이 特殊性은 민족 문화의 개성을 살아있게 한다. 따라서 지역 문화는 民族文化의 傳承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산업 사회의 도시라는 것은 획일화·표준화·국제화되어 민족 문화의 개성을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족적 주체성은 文化的 獨自性으로부터 획득된다고 본다면, 지역 문화의 전통과 계승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학신문이 지역 문화의 전통을 찾아 나서고 현재 통용되는 지역 문화의 특성을 살려내는 것은 작게는 地域文化의 發展을 이끌어 가는 일이지만, 크게는 民族文化의 主體性을 지키 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가장 地域的인 것이 가장 民族的인 것이라는 명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80년대에 들어 지방화 시대, 지방 문화 시대를 강조하면서 지역 문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배경에는 민중·민주·민족 문제가 함께 걸려 있기 때문이다. *